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26.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김 우 람	전 화	044-202-1711 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김 금 찬 손 태 종		043-719-9200 043-719-9210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안 병 선 김 동 근		051-888-3330 051-888-335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송 준 현 강 준 혁		044-202-3725 044-202-205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팀 장 담 당 자	유 주 현 박 종 용		044-202-2790 044-202-27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이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영화관이나 소극장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재개하는 프로야구 관중 입장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구단·협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6.28.~7.11.)의 8.5%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 수도권외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평균 환자 수 : (6.28.~7.11.) 15명 → (7.12.~7.25.) 15.4명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월 28일 ~ 7월 11일		7월 12일 ~ 7월 2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8명		19.9명
수도권	15명		15.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9.6명	⇒	31.4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2건		8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5% (61/720)		6.3% (45/719)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 다만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7.11.)에 비해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이 어딘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누적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국경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다만 이런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해외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하였다.
 -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1.)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하였으며,
 -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하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하여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3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 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누적) (6.1.~6.7.) 11명 → (6.22.~6.28.) 67명 → (7.13.~7.19.) 132명
-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 관련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7.24)
-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향후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 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백신·치료제 개발 동향 】

- (해외 백신)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팜 등이 선두그룹이다.
- (해외 치료제) 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하고,
 -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20년 하반기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내 백신) 주요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 제넥신은 지난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치료제)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 예정이다.

-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7.17.)받았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 중이다.
- 약물재창출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치료제, 방역 물품에 걸친 국제 협력 체제인 ACT-A*를 가동하고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보급 목표를 제시(7.2.)하였다.

*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 백신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설치를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7개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 참여국(고소득국)을 통해 재정 확보 → 참여 제약회사와 백신공급 계약 → 제약회사가 개발 후 참여국 공급(최대 인구 20% 물량) 및 저소득국 지원

【 정부 대응 현황 및 계획 】

-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내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 중이다.
-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제3차 추경으로 1,9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허가 사전상담 및 신속처리 등 규제지원과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효능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 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 ‘국가 감염병 임상 시험센터’로 지정하여 국내환자 부족에 따른 임상시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앞으로 COVAX와 개별기업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COVAX 협상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분부장(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한다.
- 해외백신 도입 TF를 구성하고, 7월 21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 및 보건복지부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램데시비르를 추가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5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후 현황

- 지난 7월 24일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되었다.
-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 총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 연수원과 사회복지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 * 3명은 현재 재검중
- 현재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 내 시설관리,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능동적·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09개소, ▲PC방 146개소 등 32개 분야 총 5,31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전북에서는 노래연습장 13개소 등 561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PC방 6개소 등 15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8개반, 38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4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0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0,2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6,9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4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5)는 운동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5일) 입소 169명, 퇴소 15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